

트럼프즘의 유럽화와 영국 정치의 극단화 : 르완다 망명자 송환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한 미 애 (계명대학교)
(hahnmiaee@gmail.com)



국문요약

본 연구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보수당이 추진한 르완다 망명자 송환 정책을 사례로, 미국발 포퓰리즘 전략인 트럼프즘(Trumpism)이 영국 정치에 어떻게 수용·변형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영국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 「Rwanda Safety (Asylum and Immigration) Act」 제정을 통해 정책이 입법화되었으며, 이는 ‘국경 통제’와 ‘국민 보호’라는 감성적 정치 수사를 앞세워 사법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킨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실전으로 평가된다. Mudde의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개념과 Norris & Inglehart의 문화적 반동 이론을 바탕으로 트럼프즘의 정치·정서 동원 전략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즘은 영국 정치에서 제도권 권력과 결합하며 법치주의·사법 독립·소수자 권리·다원주의 등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칙과 구조적으로 충돌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사법부, 시민사회, 정권 교체를 통한 대응은 영국 민주주의의 제도적·사회적 복원력을 확인시켰다.

주제어 : 트럼프즘,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보수당, 르완다 망명자 송환 정책, 영국 정치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22S1A5C2A04093484).

I. 서론

브렉시트(Brexit)는 단순한 유럽연합 탈퇴를 넘어 영국 정치 지형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경 통제(Border Control)’와 ‘국민 보호(Keep Britain safe)’를 둘러싼 정치 담론은 영국 보수당을 비롯한 주류 정치 세력의 정책 기조를 민족주의적이며 배타적인 방향으로 재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담론적 전환은 포퓰리즘적 정서 및 전략의 제도화를 촉진하였으며, 다문화주의에 대한 부정적 프레이밍은 ‘영국적 가치’를 민족 중심적 정체성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정진영 2021).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르완다 망명자 송환 정책(Rwanda asylum plan)’은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 단지 수사적 담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국가 정책으로 구현되어 제도권 권력으로 기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정책은 영국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를 제3국인 르완다로 이송하여, 해당 국가에서 난민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Walsh 2024). 이는 1951년 유엔난민협약 제33조의 ‘비강제송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 (UN General Assembly 1951) 및 유럽인권협약 제6조와 제13조에 명시된 ‘적법절차 원칙(Principle of Due Process)’에 위배되는 조치이다. 2023년 영국 대법원이 해당 정책이 위법임을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당 정부는 2024년 「Rwanda Safety (Asylum and Immigration) Act」를 제정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제도화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 조치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한편, ‘국경 통제(Border Control)’ 및 ‘국민 보호(Keep Britain safe)’와 같은 감성적 정치 수사를 통해 정책의 정당성을 구축하였다. 수엘라 브레이버먼(Suella Braverman) 전 내무장관과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는 해당 정책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법조계, 언론, 인권단체 등을 ‘좌파 활동가’이자 ‘국민 의사를 방해하는 엘리트’로 명명하였으며, 이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비국민화하는 전략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담론 전략은 Mudde(2019)가 정의한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핵심 속성 즉, 엘리트에 대한 적대성, 반다원주의, 반법치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며(Mudde 2019, 6), Norris & Inglehart(2019)가 제시한 ‘문화적 반동(cultural backlash)’ 이론의 전형적 양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Norris & Inglehart 2019, 221-223). 영국 보수당의 정당화 전략은 정치적 설득을 넘어선 전략적 행위로 기능하였으며, 이는 민주주의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영국 정부는 공포, 불안,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담론 전략의 자원으로 활용하며, ‘국경 통제’를 대중적 공감을 유도하는 핵심 정치 의제로 부각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절차적 규범은 점차 상대화되었으며, 사법부의 판단은 ‘선출되지 않은 엘리트의 월권’으로, 인권 담론은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좌파적 이상주의’로 재구성되었다. 그 결과, 권력 간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원칙들은 ‘국민적 정당성’과 ‘정책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점차 약화되었다. 이는 포퓰리즘이 더 이상 체제 외부의 반체제적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집권 세력에 의해 체제 내부에서 권력 재생산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정치학계에서도 활발히 분석되고 있다. Bonansinga & Forrest (2025)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보수당이 포퓰리즘 담론을 제도화하는 과정을 ‘정책 감염(populist contagion)’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르완다 송환 정책이 영국 내 포퓰리즘 담론 확산의 핵심 사례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르완다 송환 정책을 다수 사례 중 하나로 간략히 다루는 반면, 본 연구는 해당 정책을 단일 분석 단위로 삼아 정책 기획 · 입법 · 사법 충돌 · 정치적 정당화 전략을 심층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제도화 과정을 보다 종합적으로 규명한다. Alexandre-Collier(2022)는 영국 보수당 내에서 포퓰리즘이 제도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한 바 있다. Alexandre는 영국 보수당에서 나타난 이른바 ‘포퓰리즘 가설(populist hypothesis)’을 검증하기 위해 EU 국민투표 결정(데이비드 캐머런 정부)과 브렉시트 이행 과정(보리스 존슨 정부)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주류 포퓰리즘 이론을 넘어 Peter Mair의 ‘포퓰리스트 민주주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절차적 포퓰리즘과 실질적 포퓰리즘의 두 측면이 각 시기에 어떻게 드러났는지 밝혔다. 캐머런 총리(2005 ~ 2016)시기의 통치 방식은 당내 경선과 국민투표를 통한 지도자-대중 관계 재구조화 등 절차적 포퓰리즘의 요소를 반영하였다. 반면 존슨 총리(2019 ~ 2022)의 리더십은 강경한 브렉시트 노선, 반이민 · 반의회 담론을 결합한 새로운 실질적 포퓰리즘 레토릭의 전형으로 묘사되었다. 두 지도자 모두 Mair의 이론에서 제시된 포퓰리즘적 특성을 일정 부분 내포하고 있었으나, 캐머런과 존슨의 통치 방식은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지도자의 특성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으며, 결과적으로 ‘포퓰리즘 가설(populist hypothesis)’이 전면적으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Alexandre-Collier 2022).

반면, 본 연구는 미국에서 기원한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인 트럼프즘이 유럽, 특히 영국 정치에 어떻게 수용되고 변용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 시각을 제시한다. 특히 영국 보수당의 이념적 · 전략적 재편이 트럼프즘의 유럽화라는 맥락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를 중심으로 독창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의 르완다 망명자 송환 정책을 사례로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제도화 과정이 영국 내 정치 구조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해당 정책은 어떠한 정치 담론과 전략을 통해 정당화되었는가? 둘째, 이 정책은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어떤 핵심 요소들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가? 셋째, 이러한 정책 추진과 입법화 과정은 영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Mudde의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개념과 Norris & Inglehart의 문화적 반동 이론을 분석 틀로 채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즘의 유럽화 현상이 영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Ⅱ. 권위주의적 포퓰리즘과 트럼프즘(Trumpism)의 유럽화

21세기 초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국가들의 주요 정치 현상으로 부상하였다(Foster & Feldman 2021). 특히 ‘권위주의적 포퓰리즘(authoritarian populism)’은 단순한 대중 영합을 넘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 다원주의, 견제와 균형 제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정구연 2022, 150). 이러한 흐름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미국 대통령 당선(2016) 이후 더욱 확산되었으며, 영국 역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기점으로 트럼프즘과 유사한 정치 전략과 레토릭(rhetoric)이 제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장에서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개념과 트럼프즘의 정치 전략을 고찰하고, 영국 정치, 특히 보수당의 정책과 정당화 담론에 어떻게 이식되었는지를 분석한다.

1.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개념과 핵심 구성 요소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은 포퓰리즘이라는 넓은 정치 범주의 하위 유형으로, 엘리트에 대한 적대감, 민족주의적 정체성의 강조, 반(反)이민 담론, 법치주의 및 자유주의 제도에 대한 회의를 결합한다. Mudde(2019)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을 ‘반다원주의적 일원주의 정치관에 기초한 세계관’으로 정의하며, 다수의 ‘진정한 국민’과 소수의 ‘부패한 엘리트’ 간 대립 구도를 그 핵심으로 본다(Mudde 2019, 6). 이러한 정치관은 다원주의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나 사법부 독립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적 절차를 부정하거나 우회하려는 성향을 보이며, 권위주의적 경향과 결합할 때 심각한 제도적 위협을 발생시킨다. Müller(2016) 역시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에 내재한 반다원주의적 논리로 파악하며, 포퓰리스트들은

자신들만이 ‘진정한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다양성과 견제 장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한다(Müller 2016). Norris & Inglehart(2019)은 포퓰리즘을 권위주의·자유주의 가치 대립의 맥락에서 파악하며,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을 질서·안보·전통과 같은 보수적 가치에 대한 강조로 규정한다. 이들은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성장을 ‘문화적 반동(cultural backlash)’이론으로 설명하며, 포퓰리즘 지지의 기반이 단순한 경제적 박탈감이 아니라 전통적 가치관과 정체성이 위협받는다는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에서 비롯된다고 본다(Norris & Inglehart 2019, 221-223). 특히 이민, 성 소수자의 권리, 다문화주의, 국제주의 등에 대한 반발이 중요한 트리거(trigger)로 작용하며, 이는 전통적 보수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위기감을 느끼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핵심이 단지 정책 내용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감정의 정치화에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은 선거를 통해 일시적으로 대중적 정당성을 확보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과 규범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실제로 헝가리, 폴란드, 브라질,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경향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으며, 영국 또한 예외가 아님을 이후 사례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¹⁾.

이처럼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이데올로기, 정치문화, 담론, 정치 스타일 등 여러 차원에서 제시되어 왔다. Ruth Wodak(2015)은 극우 포퓰리스트들의 담론을 ‘공포의 정치(politics of fear)’로 규정하고, 이민자 등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와 위기 담론을 통해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핵심 전략임을 강조한다. Moffitt(2016)은 포퓰리즘을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퍼포먼스 양식, 엘리트에 대한 조롱과 ‘나쁜 매너’, 위기의 지속적 연출로 특징지어지는 정치적 스타일로 파악하며, 지도자의 특정한 이미지를 통해 직접적으로 ‘국민’ 대 ‘엘리트’의 대립 구도를 연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한다(Moffitt 2017, 43-45). Laclau(2005)는 포퓰리즘을 특정 이념이라기보다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인민 대 엘리트’의 대립 구도로 묶어내는 담론적 정치 논리로 간주하여, ‘인민’ 자체를 여러 요구를 결집하는 과정에서 탄생하는 유동적 의미의 ‘빈 기표(empty signifier)’로 파악한다. 즉, Mudde와 Müller가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이념적 성격과 민주주의 훼손 측면을 강조한다면, Wodak과 Laclau는 담론 및 수사 전략에 주목하고, Moffitt는 정치 과정의 스타일이라는 관점에서 포퓰리즘을

1)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총리와 여당 피데스(Fidesz)의 ‘비자유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Prawo i Sprawiedliwość, PiS)정부의 권력 견제 장치 약화 등 민주주의 후퇴 가속화,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Messias Bolsonaro) 전 대통령의 우익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해석한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은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현상의 복합적 성격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분석 범주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개념 규정과 담론·문화적 특성 설명에 상대적으로 치중한 반면, 포퓰리스트 집권 세력이 민주주의 제도 내부로 어떻게 침투하여 헌정주의 원칙과 충돌하고 구체적 정책으로 법제화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흡하였다. 다시 말해,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 선출된 후 제도권 내에서 작동하며 기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구조를 잠식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제도 침투와 충돌, 정책화 과정을 집중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특히 3장에서 영국 보수당 정부의 ‘르완다 망명자 송환 정책’ 사례 분석에서 Mudde의 개념 정의와 Norris & Inglehart의 이론을 활용하여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이론과 현실을 연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 영국 정치의 제도와 법률에 이식되는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트럼피즘의 정치 전략과 권위주의적 전환

트럼피즘은 도널드 트럼프의 정치 행보를 통해 구현된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전형적 사례로 개인적 특성과 전략적 양식이 결합된 정치 방식으로 정의된다.(박인휘 2024, 120-122; 박순애 2025, 4). Mudde(2019)는 트럼피즘을 단지 극우 포퓰리즘이 아닌 제도 내부로 침투한 권위주의적 행태의 대표 사례로 보며, 그 핵심 전략을 ① 엘리트·언론·지식인에 대한 불신과 공격을 조장하는 것 ② 이민자와 외부자를 국가주의적 담론으로 타자화하는 것 ③ 사법제도·의회·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유도하고 ‘대안적 사실’을 제시하는 반지성주의 ④ 소셜미디어 등 비전통적 미디어를 통한 직접적 대중 동원으로 정당과 의회의 중개 역할을 우회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트럼피즘은 특히 감정 정치(emotionalized politics)와 결합되어 이성적 토론보다는 분노, 두려움, 혐오 등 부정적 정서를 정치 동원의 자원으로 삼는다. 이러한 감정 동원은 ‘우리 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과 맞물려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단순화하고 특정 사회집단(이민자, 무슬림, 페미니스트 등)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트럼피즘은 미국 고유의 정치제도 속에서 출현하였지만 이후 전 세계 보수·극우 정치세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유럽에서는 헝가리의 오르반(Orbán) 정부,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PiS), 이탈리아의 멜로니(Giorgia Meloni) 내각, 프랑스의 마린 르 펜(Marine Le Pen)

등 여러 정치세력이 트럼프즘적 전략과 레토릭을 흡수하였으며, 영국 보수당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관찰되듯 주류 보수정당이 극우 포퓰리즘 담론을 선제적으로 수용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려는 전략과 맥락을 같이 한다(Schain 2008).

결론적으로, 트럼프즘은 특정 정치인의 스타일을 넘어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 제도 내부로 침투한 정치 전략의 총합으로 볼 수 있다. Mudde(2019)는 트럼프 집권 시기의 정치가 단순한 대중 영합과 민족주의에 그치지 않고 기존 민주주의 제도를 내부에서 비정상화하며 전복하려 한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적 통치 정당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Wodak(2015)은 이러한 전략을 ‘공포의 정치(politics of fear)’로 설명한다. 실제로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과 집권 초기 “우리는 공격받고 있다”, “국경을 넘는 범죄자들”, “좌파 언론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 등의 담론을 통해 분노와 두려움을 정치 동원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이러한 감정의 정치화는 정당 간 경쟁을 가치 기반의 갈등으로 전환시켜 반대 정당이나 반대 의견을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 문화를 확산시켰다. 이와 같은 전략은 특히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그 결과 권위주의적 조치들도 오히려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다.

트럼프즘은 이처럼 전통적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와 규범을 우회하거나 재구성하려는 전략으로 기능하며, 이는 단지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유럽 일부 국가들은 트럼프즘을 단순 모방이 아닌 자국 정치 현실에 맞게 ‘유럽화’한 형태로 수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도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영국 정치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브렉시트를 기점으로 보수당은 트럼프즘의 전략과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이를 자국 정치 맥락에 맞게 변형해 나갔다.

3. 트럼프즘의 유럽화와 영국 보수당의 우경화

영국은 트럼프즘의 유럽적 수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국가 중 하나로, 그 영향은 정책 결정과 정치적 수사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구현되었다.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 재임 시기(2019 ~ 2022)에 나타난 일련의 우경화 조치는 의회의 강제 정회(prorogation), 사법부에 대한 공개적 비판, 이민자에 대한 배제적 언사 등을 포함하며, 이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전형적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향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치 방식과 다수의 유사성을 보이며, 국내외 언론은 존슨을 ‘브리튼 트럼프(Britain Trump)’로 지칭하

면서 양자의 정치적 성향을 자주 연결시켰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영국 보수당의 정치 행태는 단순한 국내 정치의 산물이라기보다 트럼프즘의 유럽적 수용과 제도화 과정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브렉시트와 트럼프즘 간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가 유럽 포퓰리즘 확산을 견인했다는 해석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보다 앞선 2016년 6월 23일의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포퓰리즘의 전환점이었음을 강조한다. 특히 ‘Take Back Control’이라는 브렉시트 캠페인의 핵심 구호는 미국의 ‘Make America Great Again’과 유사한 주권 회복 담론으로, 양국 모두에서 정체성 위기와 제도 불신을 활용한 감정 정치(emotional politics)의 전략적 장치로 기능하였다(Norris & Inglehart 2019). 이러한 점에서 브렉시트는 트럼프즘의 유럽적 전조로 작용하였으며, 영국은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 제도화되는 정치 실험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브렉시트는 단순한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라는 정치적 결과를 넘어 트럼프즘적 정치 전략이 영국 정치에 점진적으로 이식되는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수당이 주도한 브렉시트 국민투표 캠페인은 트럼프즘적 정치 전략이 영국 정치에 도입되는 분기점으로 작용하였으며, 이후 브렉시트 이행 과정에서 이러한 경향은 점차 제도화되고 정치 담론의 주류로 부상하였다. ‘Take Back Control’이라는 브렉시트 캠페인 구호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수사로서, 국민 주권 상실과 엘리트의 배신이라는 대중의 분노를 결집시켰다. 브렉시트 이후 보수당은 반이민·반사법(反司法)·반언론 담론을 통해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요소를 점차 흡수하였다. 특히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재임 시기에 보수당 정부는 의회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행정부 권한을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정치 스타일은 트럼프즘과 유사한 반(反)제도주의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2019년 하반기 브렉시트 일정을 둘러싼 대립 국면에서 존슨 총리가 의회를 ‘프로로그(prorogation)’ 조치²⁾로 일시 정회시킨 결정은 민주주의 절차적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평가되었다. 이 조치는 2019년 영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보수당은 사법부를 ‘국민 의사를 방해하는 엘리트’로 공격하며 자신들의

2) 프로로그(prorogation)는 영국 의회에서 회기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절차로, 통상 회기 말기에 짧게 실시되며, 국왕의 특권 권한에 의해 총리가 관례적으로 권고하고 승인받아 시행된다. 2019년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 직전인 9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5주간 의회를 중단하도록 조정하였는데, 이는 브렉시트를 밀어붙이기 위해 의회를 정상적인 수단으로 견제하려던 조치였다. 영국 대법원은 이 조치에 대해 헌법 위반 판결을 내렸고, 의회는 복귀되어 조치가 무효화 되었다.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2022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수엘라 브레이버먼(Suella Braverman) 재임기(2022 ~ 2023년)에는 보수당의 우경화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브레이버먼 장관은 다문화주의의 실패 선언, 좌파 성향 법조인에 대한 공개 비판, 난민·망명 신청자의 범죄자 취급 등 트럼프즘적 언어 표현을 노골적으로 사용하였다(BBC News 2023). 특히 2023년에 추진된 르완다 망명자 송환 정책은 영국 보수당 우경화의 정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정책은 국제사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인권 침해 우려를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Rwanda Safety (Asylum and Immigration) Act」로 입법화되었다. 해당 법률은 대법원의 위헌 판단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 단순한 정치 수사나 담론 수준을 넘어, 구체적 제도 장치로 전환되는 사례에 해당된다.

이러한 보수당의 강경 노선은 단지 자율적인 이념 전환이라기보다, 영국 내 극우 포퓰리즘 세력과의 경쟁에서 비롯된 전략적 대응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브렉시트 이후 등장한 Reform UK(구 Brexit Party)는 영국독립당(UKIP)의 정치적 기반을 계승하며 반이민·반 EU 담론을 전면화하였고, 대표인 Nigel Farage는 보수당을 향해 지속적인 우클릭 압력을 가해왔다. 특히 2024년 총선을 앞두고 Reform UK가 주요 여론조사에서 보수당을 앞서는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보수당 내부에서는 급진 우파 의제의 선점을 통한 유권자 결집 전략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르완다 망명자 송환 정책과 같은 트럼프즘적 조치의 제도화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보수당의 이념 정체성이 외부 극우 정당과의 구조적 경쟁 속에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제도화 과정에서 정당 간 정치적 역학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은 더 이상 일탈적 선택이 아니라 ‘국민 보호’라는 명분 아래 합리성과 정당성을 부여받는 정치 전략으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담론적 전환은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경계를 점차 허물었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영국 보수당은 미국발 트럼프즘의 전략과 수사를 자국 정치에 적극 수용하면서, 그 정치적 정체성과 정책 노선을 재조정해 왔다. Mudde(2019)와 Norris & Inglehart(2019)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에 대해 문화적 정체성 위기와 제도 불신을 결합하여 대중적 정당성을 구축하고, 트럼프즘은 이를 감정 정치와 반제도 전략으로 구체화한 모델로 평가했다. 영국 보수당은 브렉시트 이후 이러한 전략을 점차 제도화하였으며, 르완다 송환 정책은 극단적 사례로 분석될 수 있다. 이에 이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설계되고 추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 영국의 법·제도에 어떻게 이식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Ⅲ. 트럼피즘적 전략의 제도화: 르완다 송환 정책의 형성과 추진 과정

르완다 송환 정책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치에서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 국가 정책의 형태로 제도화된 대표적 사례이다. 이 정책은 불법 입국하거나 망명을 신청한 이주민을 영국에서 심사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아프리카 르완다로 이송해 그곳에서 난민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구상은 국제 인권법 및 유엔 난민협약(1951), 유럽인권협약(1950)의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였으며, 영국 사법부로부터도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보수당 정부는 2024년 해당 정책을 「Rwanda Safety (Asylum and Immigration) Act」로 입법화하였는데, 이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전략이 국가 제도를 통해 공식화되는 경로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해당 정책의 형성과 추진 과정을 정치적 맥락 속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능케 한 정당화 전략과 제도적 경로를 추적함으로써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제도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정치적 기획과 담론 형성: 브렉시트 이후의 이민 통제

브렉시트 이후 영국 보수당은 국가 주권 회복과 국경 통제를 핵심 정당 정체성으로 내세워왔다. EU 탈퇴로 유럽연합 차원의 난민 분담 책임과 규제가 사라지자, 보수당은 한층 강경한 이민 통제 정책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사실 영국은 브렉시트 이전에도 EU 차원의 이민·난민 정책에 선택적으로 참여하며 독자적 통제를 중시해 왔는데, 이는 유럽 통합 과정에서도 양쪽의 이점을 얻고자 했던 영국의 오랜 이민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Geddes 2005).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에 대한 강경 대응은 전통적 보수 유권자층의 요구에 부합할 뿐 아니라, 트럼피식 감정 정치와 정체성 보호 담론과도 일맥상통하는 전략이었다(Goodwin 2023; Norris & Inglehart 2019, 221-223).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처해 온 이민 정책 상의 내재적 모순 즉, 경제적 필요에 따른 개방성과 정치적 압력에 따른 통제 요구와도 연결된다(Freeman 1995; Hampshire 2013; Castles & Miller 2009). 다시 말해, 영국 보수당은 브렉시트로 외부 제약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러한 모순을 포퓰리즘적 강경 이민 억제 노선으로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21~2022년 사이 도버 해협을 통해 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난민 수가 급증하면서, 언론 보도와 야당의 비판이 집중되었다. 이 문제가 국가의 '통제력 상실' 프레임으로 부각되며 보수 지지층의 불안을 크게 자극하였다(BBC News 2022).

이러한 담론 환경 속에서 영국 내무부는 이민자 수용 능력의 한계와 불법 입국자 선별 처리라는 명분 아래 르완다 송환 정책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는 난민 문제를 영국 국내가 아닌 제3국에서 처리함으로써, 자국의 국경 통제와 주권 수호 의지를 부각하려는 구조적 시도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접근은 2010년대 EU가 튀르키예와 맺은 난민협정(EU-Turkey Deal)을 통해 시도했던 모델과 유사하며, 유럽 각국의 포퓰리즘 정당들이 난민 문제를 외주화(outsourcing)함으로써 자국 내 지지층을 결집시켰던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Bendel 2016). 실제로 유럽 국가들은 2000년대부터 이민·난민 정책의 외주화를 모색해왔으며, 제3국과의 협력을 통한 난민 문제 해결 방식은 새로운 발상이 아니었다(Boswell 2003). 이러한 외주화 전략은 중심부 국가가 난민 보호 책임을 주변부 국가로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왔으며(Betts 2010), 난민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인 우려를 받아왔다(Crépeau 2013).

이러한 국제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이후 영국에서는 난민 보트 사태를 중심으로 정부와 언론이 난민 이슈를 전형적인 ‘안보 문제’로 재구성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망명 희망자들을 ‘불법적으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는 식으로 묘사하거나, ‘국경 통제 상실’이라는 프레임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인도적 문제를 법질서와 치안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전형적인 ‘이민의 안보화(securitization)’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유럽 전반에서 관찰된 현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 유럽 통합 과정에서 이민과 망명 문제가 점차 치안과 질서의 프레임으로 다루어지면서, 난민은 위협적인 타자로 표상되어 왔다(Huysmans 2000). 이러한 안보화 담론은 국가로 하여금 이민자 문제를 법적 통제와 치안의 대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즉각적인 국가 위기로 간주하게 만들었다. 영국 정부의 대응 또한 이러한 프레임을 반영하며, 망명 신청자를 테러 위협이나 사회 불안과 연결 짓는 수사적 전략을 적극 활용하였다(van Munster 2009; Guild 2006). 결국 난민 문제는 공공연히 법과 질서의 프레임으로 재구성되었고, 이를 통해 정부는 강경한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르완다 송환 정책의 기획 배경에는 브렉시트로 확보된 정책 자율성, 전통적 보수 지지층의 정치적 요구, 유럽에서 확산된 난민 외주화 모델의 영향, 그리고 난민 이슈의 안보 위협화라는 복합적 요인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2. 정책 입법과 추진 과정: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역할

2022년 4월, 당시 내무장관 프리티 파텔(Priti Patel)은 르완다 정부와 ‘이주 및 경제발전 파트너십(Mig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의 일환이면서, ‘난민 협력 방식(asylum partnership arrangement)’을 규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서 송환 정책을 공식화하였다. 2022년 6월로 예정되어 있던 첫 번째 송환 항공편은 국내외 인권 및 법조 단체들의 소송 제기기에 따른 법원의 긴급 금지 명령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이는 해당 정책의 법적·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22년 12월,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은 해당 정부 정책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며 1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023년 6월, 잉글랜드·웨일스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2 대 1의 다수 의견으로 르완다가 안전한 제3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책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서 2023년 11월, 영국 대법원(UK Supreme Court)은 만장일치 판결을 통해 정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해당 정책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르완다의 난민 보호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근거로 망명 신청자가 제3국으로 추방될 경우 1951년 난민협약이 명시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이 침해될 실질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르완다로 송환된 망명 희망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결국 자국으로 재송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판결은 행정부의 이민 통제 목표와 사법부의 인권 중심적 법적 판단 사이의 구조적 긴장을 드러내며, 영국 헌정 질서 내 권력 분립 원칙의 작동 방식과 한계를 가시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사법부의 연속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헌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대응 조치들을 모색하였다. 항소법원에서의 패소 이후, 리시 수낙 총리 내각은 정책 지속을 위한 두 가지 선택지에 직면했다. 정책을 철회하거나, 입법을 통해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후자를 택했다. 2023년 말 대법원 판결 직후, 정부는 르완다와 기존 양해각서를 대체하는 ‘신규 이양 협정(UK-Rwanda Treaty)’을 신속히 체결하고 동시에 긴급 입법을 추진했다. 2024년 1월 의회에 발의된 ‘Rwanda Safety(Asylum and Immigration) Bill’³⁾에는 르완다를 법적으로 ‘안전한 제3국(safe third country)’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특별법은 2024년 4월 여당의 의회 다수를 바탕으로 신속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으며, 해당 법률은 르완다의 실제 안전성과 무관하게 법률상 르완다를 ‘안전한 국가’로 간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법원이 이와 관련된 사실 판단이나 위헌적 요소를 다룰 수 없도록 하였다(Institute for Government 2024). 이는 법 개정을 통해 사법부가 지적한 위헌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입법적 시도였다.

이러한 입법 조치는 단순한 정치적 전략 차원을 넘어 제도 내부에서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3) ‘Safety of Rwanda (Asylum and Immigration) Bill’은 2023년 12월 하원과 상원에 제출된 법안(original bill) 단계에서 사용된 정식 이름이며, 법률이 공포되어 2024년 4월 25일자로 제정된 후 공식적 법안명은 ‘Safety of Rwanda (Asylum and Immigration) Act 2024’이다.

이 어떻게 제도화되고 정당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국민의 뜻에 반하는 좌파적 엘리트주의’로 몰아붙였고, 입법부의 권한을 동원해 그 판단을 무력화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러한 전략은 트럼프즘이 미국에서 보여준 방식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제도의 형식은 유지하면서도 그 핵심 원칙인 법의 지배와 권력 간 견제 메커니즘을 약화시키려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특징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를 제도 외부에서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제도 내부에 머물며 법과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통제 장치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영국 정부가 르완다 송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추진한 법률 재정 방식에서도 확인되며, 이는 트럼프즘이 미국 내에서 보여준 제도 내 권력 재편 전략과 구조적 유사성을 지닌다.

3. 정치적 정당화 전략과 대중 동원 방식

보수당 정부는 르완다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뜻(the will of the people)’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거듭 강조하였다. 브레이버먼 내무장관은 다문화주의 실패와 범죄율 증가의 원인을 이민자 탓으로 돌리면서, 본 정책이 영국의 국경을 되찾고 질서를 회복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BBC News 2023). 수낙 총리 또한 좌파 판사들과 국제 인권조약이 영국의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책 반대자들을 ‘국가 안보를 방해하는 엘리트’로 프레임화하였다. 이러한 담론 전략은 트럼프즘이 활용한 감정 기반 정치 전략과 밀접한 유사성을 보인다. 즉, 정책의 정당성과 도덕성의 근거를 법이나 제도와 같은 공식적 기준이 아닌 ‘대중 정서’에 기반을 두는 방식이다. 특히, 언론·사법부·인권단체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은 ‘국민’과 ‘엘리트’를 대립시키는 이분법적 구도를 강화함으로써, 정책 추진이 소수 기득권에 맞선 다수 국민의 ‘민주적 선택’이라는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받도록 하는 데 활용되었다.

정부의 정치적 담론 전략은 해당 정책의 정당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부는 SNS, 유튜브, 우호적인 보수 성향의 언론을 통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전통적 주류 언론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통해 ‘대안 정보 체계(alternative information system)’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전략은 SNS를 주요 대중 동원 수단으로 활용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채택했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의 매우 유사하며, 영국 정치권 역시 유사한 포퓰리즘적 소통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수당은 브렉시트 이후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를 주요 위협 대상으로 설정하여 대중의

위기 의식을 조성하였으며, 제3국 송환 정책을 통해 국경 통제를 ‘정치적 성과’로 시각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입법부 권한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 제도 내 절차를 활용해 법치주의를 약화시키는 전형적 사례로 판단될 수 있다.

IV. 영국 보수당의 트럼피즘적 통치 전략과 헌정주의 원칙의 충돌

1. 르완다 망명 송환 정책에 나타난 트럼피즘적 요소

영국 보수당 정부가 추진한 ‘르완다 망명자 송환 정책’은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유럽적 확산과 영국 정치의 급진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정책은 불법 이주와 인신매매 조직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트럼피즘적 반이민 정서의 급진적 구현이며 영국이 오랜 기간 형성해 온 인권 보호 체계와 국제 난민 보호 체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첫째, 영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입법을 통해 대응하며 법적 제약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을 취하였다. 영국 대법원이 르완다 송환 계획을 위법으로 판결하자, 수낙 총리는 긴급 입법을 통해 르완다를 ‘안전한 제3국’으로 법적으로 규정하고 향후 사법 개입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사실 판단을 법률로 부정한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비판을 야기하였다(Hansard 2024, 965-973). 특히, 정부는 새로운 법안을 통해 판사들에게 르완다를 안전하다고 간주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행정부가 입법 권한을 활용하여 사법 심사를 제한한 사례로, 법치주의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초래하였다(Leyland 2024, 995).

둘째, 정부 각료들은 국제 인권 규범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며 유럽인권재판소(ECHR) 탈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 송환 계획이 ECHR의 긴급 중지 명령에 따라 중단되자, 일부 장관들은 이를 외국 법정의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ECHR에서의 탈퇴 또는 그 효력의 일시적 정지를 주장하였다(Brown 2024, 50-52).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인권법(Human Rights Act, HRA) 및 일부 국제 인권 조약 조항의 국내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전 총리는 이러한 입법 시도가 국제 법치주의에 구조적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Brown 2024, 49-53).

셋째, 정부는 사법부와 법조계를 ‘엘리트 집단’으로 지목하며 대중의 반감과 불신을 자극하는 반엘리트 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보리스 존슨 내각에서는 이민 정책에 제동을 거는 변호사들과 판사들을 ‘좌파 인권 변호사(lefty human rights lawyers)’, ‘행동주의적 법조인(activist lawyers and judges)’ 등으로 비난하였으며, 수낙 내각 또한 이러한 레토릭을 계승하였다(Mason 2023, 177-185). 이는 법원의 독립적 판단과 정당한 사법적 감시 기능을 ‘국민 의사에 반하는 엘리트의 간섭’으로 표현함으로써 정부에 비판적인 사법부를 국민의 적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국민 대 엘리트’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통해 사법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며, 트럼프즘 통치 전략의 핵심인 반제도주의적 정서와 연결된다(Leyland 2024, 769-770).

넷째, 보수당 정부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배타적 국민 정체성 담론을 강화하였다. 브레이버먼 내무장관은 이민자 집단을 ‘우리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 타자(others who fail to become part of our society)’로 규정함으로써, 국민국가의 문화적 동질성과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배타적 애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담론을 형성하였다(Wingate 2023, 203-205). 이러한 담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반다문화 수사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며, 영국 정치 담론을 점차 배타적 민족주의의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Braverman 2023, 175-183).

위의 사례를 통해 영국 보수당이 자국의 정치적 조건 속에서 트럼프즘적 통치 전략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주권 담론의 강화와 이민 문제의 정치적 부각 속에서, 정부는 사법부, 국제기구, 다문화 엘리트를 ‘국민 의사에 반하는 외부 세력’으로 지목하며, 이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반감을 동원해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이러한 접근은 사실관계를 배제하고 제도적 제약을 무시한 채 ‘국민의 요구(the people’s demand)’를 실현한다는 명목 아래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 전략으로 작동하였다(Leigh 2016, 17-25). 르완다 송환 정책의 추진 과정은 영국 보수당이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논리를 통해 사법의 독립성, 인권 보호, 다원주의적 가치를 경시하고 대중의 정서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선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트럼프즘의 영국화: 보수당 내적 제도화와 담론 변화

트럼프즘의 영국화(Trumpism in the UK)는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영국의 정치적 맥락과 정당 구조에 맞게 트럼프즘을 전략적으로 변형하고 제도화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보수당은 정당 조직 내부에서 전통적인 엘리트 중심 구조를 탈피하고, 포퓰리즘

적 동원 방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브렉시트를 전후하여 당 지도부는 국민의 뜻을 직접 대변한다는 명분 아래, 중도 및 온건파 엘리트층을 배제하고 당 조직을 재편하였다. 특히 존슨 총리는 당내 반대 의견을 허용하지 않는 강경한 지도 방식을 취했으며, 2019년에는 브렉시트 합의 연기를 지지한 의원 21명의 당적을 박탈하여 당의 이념적 일체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도부가 당내 다원성을 제한하더라도 대중의 직접적 지지에 기반한 통치를 우선시했음을 보여준다(Alexandre-Collier 2022, 685). 이로 인해 브렉시트 강경 노선과 반이민 정서를 공유하는 세력만이 당내 주류로 남게 되었고, 당 조직은 지도부의 중앙집권적 통제 아래 재편되었다. 이러한 조직 재편 방식은 포퓰리즘 정당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략으로 이탈리아 오성운동(Movimento 5 Stelle)⁴⁾ 등 다른 유럽 사례들과도 유사하다(Müller 2016, 45; Alexandre-Collier 2022, 683-690).

조직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정치사상적 측면에서도 보수당은 트럼프즘의 담론과 전략을 자국의 보수주의 이념과 결합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중시해온 영국 보수주의는 2016년 국민투표와 그 이후의 정치적 위기를 거치며 직접민주주의와 행정부 우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념적 전환을 겪었다. 존슨 총리와 측근들은 브렉시트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의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수 대중의 직접 위임을 유일한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는 제도적 절차보다 대중의 의사를 우선시하는 포퓰리즘적 민주주의가 정당성을 구성하는 대표적 양상 가운데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보수당 정부는 반이민·반다문화 정서를 활용한 정체성 정치 전략을 적극 수용하며, 트럼프즘 의제를 유럽 사회 문제와 연결시켰다. 2020년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경찰 폭력과 제도적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로 촉발된 Black Lives Matter(BLM)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인종 정의에 대한 공공 담론을 환기시켰다. 존슨 내각은 미국 법학계에서 시작된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 CRT)’에 대한 공개적 거부를 포함하여,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반대하는 일련의 정책 기조를 드러냈다. 이러한 대응은 다문화주의, 인종 평등, 젠더 감수성 등 진보적 가치 담론에 대한 이념적 반발로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정체성 기반 문화전쟁(identity-based culture war)’의 전략을 영국 보수당이 자국의 맥락에 수용·재구성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보수당이 전통적 보수주의 정당의 범위를 넘어 학계와 시민사회 내 진보 담론을 이념적 적대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정치 전략을 채택했음을 시사한다(Trilling 2020, 175-183; 195-202).

4) 이탈리아 오성운동(Movimento 5 Stelle, Five Star Movement)은 2009년 코미디언 베페 그릴로(Beppe Grillo)와 전략가 잔로베르토 카사레지오(Gianroberto Casaleggio)가 창립한 정당으로, 반엘리트적 포퓰리즘, 직접민주주의, 환경주의를 결합한 탈이념적 성격을 지닌다.

영국화된 트럼피즘은 영국 보수주의의 애국주의 전통, 브렉시트로 촉발된 영국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나타났으며, 그 결과 국내외의 자유주의적 제약을 거부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절대화하는 정당 이념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보수당의 변화는 주류 우파 정당이 포퓰리즘 전략을 수용하며 이념적·조직적으로 재편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엘리트 연합적 성격에서 민주주의 절차보다 지도자와 대중 간의 직접적 정당성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정책 노선 또한 전통적 보수주의의 법치·경제 중심 노선에서 벗어나 정체성·주권 중심 노선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보수당은 트럼피즘의 반(反)체제 정서를 영국 보수주의 담론의 언어로 재구성하였다. 존슨 정부는 ‘국민의 친구 대 기득권의 적’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형성하며, 브렉시트와 이민 문제를 정치 의제의 중심에 배치했다. 또한, 법원과 유럽연합 같은 제도적 제약을 ‘국민의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국 중심의 급진적 정책 노선을 정당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는 트럼프가 워싱턴 기득권과 다자주의를 공격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킨 전략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지만, 영국에서는 ‘의회의 주권 회복(restoring parliamentary sovereignty)’이나 ‘제국의 후손으로서의 자부심(pride as heirs of the Empire)’과 같은 고유한 정치적 상징을 활용함으로써, 트럼피즘적 포퓰리즘 전략이 영국 특유의 정치 문화와 결합된 형태로 정착되었다. 특히 르완다 망명자 송환 정책은 이러한 긴장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영국화된 트럼피즘은 결국 브렉시트 이후 보수당의 이념과 정책 전반을 규정하며, 우파 포퓰리즘의 제도화가 어떻게 한 나라의 주류 정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3. 자유민주주의 제도와의 구조적 긴장: 민주주의 내구성의 시험

보수당이 추구한 트럼피즘적 전략들은 영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상당한 구조적 긴장(structural strain)을 야기하였다.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 표현의 자유와 공론장, 소수자 권리와 다원주의 등 핵심 민주주의 원리들과의 충돌로 나타났으며, 영국 민주주의의 내구성(democratic resilience)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1)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의 훼손

앞서 살펴본 정부의 입법 전략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보수당 정부는 이민 정책에 있어 법원의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새로운 법을 통해 정책을 밀어붙이고자 했는데, 이러한 행태는 권력분립 체계에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우려를 낳았다 (Leyland 2024, 781). 실제로 2023년 「불법 이민법

(Illegal Migration Act)』에는 영국 법원이 아닌 유럽인권재판소가 내리는 긴급중지명령(Rule 39)을 정부가 묵살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되었고, 르완다 법안 역시 사법부가 르완다의 안전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이처럼 행정부·입법부가 결탁하여 사법부의 판단 여지를 법으로 차단하는 선례는 궁극적으로 헌정 질서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킨다. 영국 대법원의 전직 판사들은 정부의 이 같은 입법 시도가 헌법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 심사를 무력화한다며 비판했으며, 유엔 인권최고대표 역시 르완다 법안에 대해 영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제인권 의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경고했다(OHCHR 2024, 7). 특히, 존슨 정부 시기 단행된 의회 프로그로(Prorogation)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이 사건은 행정부가 대중적 위임을 명분으로 법적 절차와 헌정 관행을 우회하려 할 때, 사법부가 이를 제지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견제 기능이 작동한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보수당 일부 인사들은 이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정치화된 판사로 매도하고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논의를 전개하여,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 훼손을 초래했다(Mason 2023, 179-187). 이러한 일련의 충돌은 영국 민주주의에서 ‘법의 지배(rule of law)’ 원리가 당면한 구조적 긴장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내구성(democratic resilience)’ 관점에서 볼 때, 보수당의 포퓰리즘적 통치 전략은 법치주의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국의 사법부와 헌정 질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축으로서 강한 제도적 압력을 받는 상황에 직면하였다(IFES 2023, 232-235).

2) 소수자 권리와 다원주의 원칙의 침해

트럼프즘적 정치 전략은 다수 대중의 정서에 반하는 소수자와 약자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난민·이민자, 인종 및 문화적 소수자들이 이 전략의 표적이 되었고, 이는 다원주의(pluralism)와 소수자 권리라는 민주주의 핵심 원칙과의 충돌을 야기하였다. 특히 보수당 정부의 르완다 송환 정책은 난민 신청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난민협약의 핵심 조항인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을 위반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영국 법원 또한 해당 정책이 난민을 실질적 박해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난민과 이민자를 정치적 목적을 위한 표적으로 삼고, 이들의 권리보다 국경 통제를 앞세우는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Smout & Holden 2023, 169-177). 브레이버먼 장관의 ‘다문화주의 실패’ 담론 또한 국내 소수 공동체에 대한 낙인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영국 내 무슬림과 남아시아계 이민자 집단은 정부가 자신들을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과 소외감이 확산되었다

(Khan 2023, 2). 실제로 2023년 말 잉글랜드 여러 도시에서 난민 수용시설을 겨냥한 극우 폭력시위와 소수자 혐오범죄가 발생했는데, 인권 단체들은 이에 대해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수사가 불러온 비극’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다원주의와 소수자 보호는 다양한 인종·문화·의견을 포용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러나 보수당의 트럼피즘적 노선은 다원주의를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를 체제 불만의 표적 집단으로 삼음으로써 공동체의 사회적 응집력을 약화시켰다(Wingate 2023, 199-203). 이러한 구조적 긴장은 민주주의가 단순한 다수결 지배를 넘어서, ‘다수 안의 소수 보호’라는 규범적 기준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Dahl 1989, 224). 보수당 정부의 포퓰리즘적 정책 기조 속에서 소수자 권리가 위협받고 혐오 담론이 확대되자, 이에 대응해 시민사회와 일부 의회 세력은 포용과 관용의 원칙을 옹호하는 정치·사회적 연대를 구축하였다. 이는 민주주의 내구성의 관점에서 자정 메커니즘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동시에 기존 제도들이 소수자 보호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Human Rights Watch 2025, 548-556).

결국 보수당이 트럼피즘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제도·담론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수용한 결과, 영국 민주주의는 중대한 제도적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법원과 의회, 시민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견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며 민주주의의 방어선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보수당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 속에 제도적 취약성 또한 노출되었다. 의회 다수당에 집중된 영국의 체제에서는 제도적 규율보다 정치적 자율성에 의존해온 헌정 관행이 포퓰리즘적 권위주의에 의해 쉽게 약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24년 총선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스타머(Keir Starmer) 노동당 정부가 르완다 송환 정책을 전면 폐기한 조치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회복력(institutional resilience)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Norris 2017).

V. 결론

본 논문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치에서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트럼피즘의 정치 전략과 수사적 기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영국 보수당이 이를 어떻게 수용·정착시켰는지를 르완다 망명자 송환 정책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Rwanda Safety (Asylum and Immigration) Act」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입법권의 우위 확보는, 포퓰리즘이 수사적 차원을 넘어 제도적 구조로 편입되는 경로를 입증한다.

르완다 송환 정책은 트럼프즘적 통치 전략이 법제도적 수준에서 영국 정치에 통합된 사례로 평가된다. ‘국민의 뜻’을 앞세운 보수당 정부는 사법부와 인권단체, 언론을 좌파 엘리트로 규정하며, 반대 세력을 이념적으로 주변화하였다. 이러한 담론 전략은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기능을 약화시켰으며, 헌정주의의 기반을 구조적으로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였다. 브렉시트 이후 보수당은 정체성 위기와 제도 불신이라는 감정 정치 기반 위에서 트럼프즘의 전략을 자국 정치 환경에 맞추어 구조적으로 내재화하였다.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제도화는 단순한 전략적 수용을 넘어, 입법·행정 권력 구조의 재편이라는 실질적 변화를 야기하였다. 헌정주의는 권력 분립, 법의 지배, 사법부 독립을 통해 권력 남용을 제약하는 통치 원리이나,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은 이를 ‘국민 주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엘리트의 방해물’로 간주한다. 영국 보수당 내부의 대법원 비판은 이러한 인식을 제도적 현실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민주적 헌정 질서가 상징적으로는 유지되더라도, 실제 권력 행사에 있어 제약 기능이 점차 해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법치주의 원칙의 정치적 해석은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규범적 경계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능한다.

이러한 변화는 정당 체계 내부에도 구조적 전환을 유도하였다. 보수당 내 우익 노선이 주류화되었고, 온건 보수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내부적 신뢰는 약화되었다. 법치주의, 사법 독립, 소수자 권리, 다원주의는 절대적 원칙이 아닌, 정치적 유용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조건부 규범으로 재편되었다. 트럼프즘의 제도화는 포퓰리즘이 정당성과 권력 구조를 재구성하는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영국의 민주주의는 일정 수준의 제도적 복원력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의 위헌 판결, 시민사회의 대응, 2024년 총선에서의 정권 교체는 민주주의 체제가 자정능력을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원력은 정치 환경의 변화에 취약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민주적 제도의 지속성은 능동적인 방어와 정당성에 대한 반복적인 재확인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담론 전략을 제도 분석의 차원으로 확장하고, 트럼프즘의 유럽화가 영국 정치의 법제도 구조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포퓰리즘의 제도화가 민주주의의 헌정주의적 기초와 어떤 방식으로 충돌하거나 조정되는지를 국가 간 비교 사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자유민주주의는 권력의 전략적 남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견제 장치와 규범적 정당성 구조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 박순애. 2025. 트럼프즘(Trumpism)의 대두 배경과 행정학적 의미. 한국행정학보 59(1), 1-37.
- 박인휘. 2024. 미국 2024 : 트럼프의 재집권과 '보편적' 트럼프즘. 아세아연구 68(1), 119-145.
- 정구연. 2022. 트럼프즘과 트럼프 독트린 : 이민자 인식에 대한 포퓰리즘의 영향력 분석. 한국과국제사회 6(2), 147-176.
- Alexandre-Collier, A. 2022. David Cameron, Boris Johnson and the populist hypothesis in the British Conservative Party.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20(5), 527-546.
- Bendel, P. 2016. Refugee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 Protect human rights! Friedrich-Ebert-Stiftung.
- Betts, A. 2010. The refugee regime complex. Refugee Survey Quarterly 29(1), 12-37.
- Bonansinga, D., & Forrest, C. 2025. Stop the boats: Populist contagion and migration policymaking in the UK. Ethnic and Racial Studies.
- Boswell, C. 2003. The external dimension of EU immigration and asylum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79(3), 619-638.
- Braverman, S. 2023/09/26. Keynote Address by UK Home Secretary Suella Braverma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출처: <https://www.aei.org> (검색일: 2025. 08. 12.).
- Castles, S., & Miller, M. J. 2009.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4th ed.). Guilford Press.
- Council of Europe. 1950.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Council of Europe.
- Crépeau, F. 2013.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Regional study: management of the external borders of the European

Union and its impact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A/HRC/23/46).

- Foster, R., & Feldman, M. 2021. Populism and technocracy: Conflict, convergence and consequences in European governance.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Research* 17(3), 343-360.
- Freeman, G. P. 1995. Modes of immigration politics in liberal democratic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9(4), 881-902.
- Geddes, A. 2005. Getting the best of both worlds? Britain, the EU and migration policy. *International Affairs* 81(4), 723-740.
- Goodwin, M. 2023. *Values, Voice and Virtue: The New British Politics*. Penguin Books.
- Hampshire, J. 2013. *The Politics of Immigration: Contradictions of the Liberal State*. Palgrave Macmillan.
- Huysmans, J. 2000. The European Union and the securitization of migration.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8(5), 751-777.
-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lectoral Systems. 2023. Democratic resilience in the 21st century: Challenges and innovations, 232-235. IFES.
- Khan, S. 2023. *Migration Governance in an Age of Populism*. Routledge.
- Laclau, E. 2005. *On Populist Reason*. Verso.
- Leigh, M. 2016/06. Trumpism – British Style.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출처: <https://www.gmfus.org/news/trumpism-british-style> (검색일: 2025. 08. 12.).
- Leyland, P. 2024. The UK's Rwanda asylum policy and the courts: Reflections on the constitutional consequences? *DPCE Online* 64(2).
- Moffitt, B. 2016. *The Global Rise of Populism: Performance, Political Style, and Represent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 Mudde, C. 2019. *The Far Right Today*. Polity Press.
- Müller, J.-W. 2016. *What Is Populism?*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Norris, P., & Inglehart, R. 2019. *Cultural Backlash: Trump, Brexit, and Authoritarian*

Popu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24. Annual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reports of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and the Secretary-General. United Nations.
- Schain, M. 2008. Immigration policy and the extreme right. P. Merkl and L. Weinberg, eds. Right-wing extrem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Routledge, 167-189.
- UN General Assembly.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189, 137.
- Van Munster, R. 2009. Security, Immigrants and Integration: Towards a Politics of Fear. Palgrave Macmillan.
- Wodak, R. 2015. The Politics of Fear: What Right-Wing Populist Discourses Mean. SAGE Publications.
- BBC News. 2022/04/14. Rwanda asylum plan: UK to send some asylum seekers to Rwanda. 출처: <https://www.bbc.com/news> (검색일: 2022. 04. 14.).
- BBC News. 2023/12/13. Braverman says Rwanda plan will restore UK border control. 출처: <https://www.bbc.com/news> (검색일: 2023. 12. 13.).
- Brown, G. 2024/01/15. Britain is turning its back on international law. Project Syndicate. 출처: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uk-rwanda-bill-undermines-human-rights-rule-of-law-globally-by-gordon-brown-2024-01> (검색일: 2025. 08. 12.).
- Human Rights Watch. 2025/01/16. UK: New government failing to uphold democratic freedoms. 출처: <https://www.hrw.org/news/2025/01/16/uk-new-government-failing-uphold-democratic-freedoms> (검색일: 2025. 08. 12.).
- Institute for Government. 2024/04/26. The Rwanda Act: What next in the courts? 출처: <https://www.instituteforgovernment.org.uk> (검색일: 2025. 08. 12.).
- Mason, R. 2023/08/16. An activist blob: Tory party attacks on lawyers - a timeline. The Guardian.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3/aug/16/tory->

party-criticisms-legal-professionals-timeline (검색일: 2025. 08. 12.).

- Smout, A., & Holden, M. 2023/12/06. UK PM Sunak's new Rwanda plan suffers blow as immigration minister quits. Reuters. 출처: <https://www.reuters.com/world/uk/uk-pm-sunak-faces-electoral-oblivion-without-rwanda-scheme-ex-minister-says-2023-12-06/> (검색일: 2025. 08. 12.).
- Trilling, D. 2020/10/23. Why is the UK government suddenly targeting critical race theory? The Guardian.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0/oct/23/uk-critical-race-theory-trump-conservatives-structural-inequality> (검색일: 2025. 08. 12.).
- Walsh, P. W. 2024/07/25. Q&A: The UK's former policy to send asylum seekers to Rwanda. The Migration Observatory, University of Oxford. 출처: <https://migrationobservatory.ox.ac.uk/resources/briefings/q-and-a-the-uks-former-policy-to-send-asylum-seekers-to-rwanda/> (검색일: 2025. 08. 12.).
- Wingate, S. 2023/09/26. Braverman: Multiculturalism has failed and threatens security. The Independent. 출처: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home-secretary-multiculturalism-prime-minister-security-b2418911.html> (검색일: 2025. 08. 12.).

● 투고일: 2025.07.15. ● 심사일: 2025.07.21. ● 게재확정일: 2025.08.08.
--

| Abstract |

The Europeanization of Trumpism and the Radicalization of British Politics: Focusing on the Rwanda Asylum Plan*

Hahn Miae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American-born populist strategy of Trumpism has been adapted to the British political context through the Conservative Party's Rwanda asylum plan in the post-Brexit era. Despite the UK Supreme Court ruling the policy unlawful, it was enacted in 2024 via the Rwanda Safety (Asylum and Immigration) Act, weakening judicial oversight while justified by appeals to "border control" and "keeping Britain safe." Drawing on Mudde's concept of authoritarian populism and Norris and Inglehart's cultural backlash theory, the analysis explores how Trumpism's emotional mobilization and anti-institutional strategies entered British legislative processes, political rhetoric, and party organization. The findings show that Trumpism has been reshaped into an authoritarian form within British politics, eroding liberal democratic norms when fused with institutional power. The case also reveals that the judiciary, civil society, and electoral change can serve as sources of institutional and societal resilience against authoritarian pressures.

<Key words> Trumpism, Authoritarian Populism, Conservative Party, Rwanda Safety Act, Institutionalization, UK Politics

* The Keimyun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Research Professor.